

민주, 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이재명 리더십 타격

무효표·기권, 찬성표도 나온듯 '노동래 161표' 보다 23표 적어 국힘 "사실상 가결"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내 이탈표 속출로 반대표 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제의 '단일대오'에 급격한 균열이 발생하고, 당내 혼란과 계파 갈등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표 11명, 기권 9명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목표했던 무소속을 포함해 170표 이상의 부결표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나, 부결표는 138명에 그쳤다.

138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가정하더라도, 당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친민주계열의 무소속 의원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기권이나 무효 등 이탈표는 36표 이상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가운데 친민주계열은 김진표·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5명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적 122명 중 114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나온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뉴스시

명,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 의힘과 정의당은 체포안 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120명에 19명이 더 가결표를 던진 것인데, 민주당에서 적어도 1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다. '이재명 방탄' 우려에 '부결'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방침을 세우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예상 밖의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력하다. 당내에선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동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온 반대 161표가 당내 단일대오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었다. 161표에도 한참 못미치는 138표가 나오며,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당내에선 표결 이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앞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검찰이 쫓아갈 영장 청구를 해 2, 3차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에 접수될 경우 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월 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대응 방침을 밝힌 김·부·장(김기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장모)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 등의 동력도 급격히 소실될 것이라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정치적 사망선고"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사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자 사실상의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제적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 체포동의안 부결 대통령실 "입장 없다"

"주체가 아닌데 언급 부적절"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뉴스시와의 통화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있을 수도 없지 않나.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수차례 별도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다 이야기한 결론이다"고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동훈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것 아냐"

이재명 부결 뒤 취재진 질의응답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 영장 재청구 시점 "통상과 같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에서 나온 뒤 "체포동의안이 박빙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제가 평가할 문제

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빠진 적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 그런데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에게 수사 계획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수사이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사건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약 15분에 걸쳐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증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 노동래 의원 사건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

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결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스시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